2017년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

일시 | 2017. 4. 7. (금) 9:30-12:20 장소 | 육이정책연구소 세미니실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7년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

□일시: 2017. 4. 7(금). 오전 9:30~12:20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외교센터 빌딩 3층)

시 간		일 정
9:10~9:30	등록	등록
9:30~9:40	개회식	개회사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 죽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국장
9:40~11:00	주제발표	발표 1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 - 발표자 : 최효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 발표 2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 발표자 : 김혜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발표 3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 - 발표자 : 유해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출산 및 부모지원단)
11:00~11:10	휴식	휴식
11:10~12:00	지정토론	조장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지정토론 김영미 교수(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국제협력팀장/출산 및 부모지원단)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준 서기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
1200~122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1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방안

최효미 부연구위원 | 육이정책연구소 육이지원연구팀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1)

-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

최효미 부연구위원

1. 서론

가. 연구 목적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2에 머물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삼식·이지혜(2014:87)는 연령별 출산율을 혼인력 지표와 출산력 지표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2005~2013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유배우율 즉 혼인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혼인율은 1995년 인구 천명 당 남성 22.9건, 여성 22.5건이던 것이 2015년 남성 13.9건, 여성 13.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3). 평균 초혼연령도 1995년 남성 28.4세, 여성 25.3세이던 것이, 2015년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평균 4세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실시된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20~44세)의 60.8%5)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응답자의 33%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결혼에 대해 미온적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이삼식 외, 2015: 332). 특히,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취업자인 경우에도 매우 높아서, 취업 미혼 남성의 38.2%와 취업 미혼 여성의 57.4%가 이에 해당하였다(이삼식 외, 2015: 333~334). 이는 미취업 남성의 35.0%

¹⁾ 본고는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육아 정책연구소'에 기초하여 작성됨.

²⁾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 _cd=1428(2016.11.30. 인출).

³⁾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일반혼인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B83A34&conn_path=12 (2016.12.02. 인출)

⁴⁾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별 평균초흔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B83A(5&conn_path=12 (2016.12.02 인출)

⁵⁾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18.1%, 하는 편이 좋다 42.7%를 합산한 값이다.

와 미취업 여성의 58.8%가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이삼식 외, 2015: $333\sim334$),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청년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를 갖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청년층의 결혼관 및 가족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및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과정에서 청년층의 결혼 연기, 즉 만혼 현상이 자발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인지, 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기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결혼 연기와 달리 결혼 의향 자체가 없는 결혼 기피의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만혼화 및 결혼 기피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는지 점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용어정의

본고에서 청년이라 함은 만 20~39세의 미혼 남녀를 의미한다6.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법령 및 제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출산 혹은 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도 청년층 혹은 미혼자연령의 정의는 만 20세~40세 미혼자로 보는 경우(김성준, 2015)부터, 20~39세(김도희, 2012), 30~39세 미혼자(이성희·권현수, 2015 등), 25~39세 미혼자(호정화, 2014등), 만 20~44세로 보는 경우(김중백, 2013 등)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양하다. 본고는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20세부터 미혼자의 수가 급감하기 전인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결혼 의향과 의사결정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여, 미혼자를 자발적 결혼연기자, 비자발적 결혼연기자, 결혼 기피자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혼 상태를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⁶⁾ 연구의 기반이 된 최효미 외(2016)에서는 만 20~44세의 미혼 남녀를 청년으로 정의하였으나, 본 고는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⁷⁾ 상기 보고서에서는 이를 '비혼'으로 정의하였으나, 미혼보다 비혼이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는 여성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결혼 기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미 혼 자	
결혼 의향	의형	의향 없음	
자발 성 및 극 성	미혼사유 :자발적 1.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3.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4.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9.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미혼사유 :비자발적 2.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5. 소득이 적어서 6.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주택마련 및 결혼 비용 등) 8. 결혼생활과 직장 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11.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비혼 사유 1.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이 싫어서 2.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3.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4.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6.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 7.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8.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들어서
대상 구분	자발적 결혼 연기	비자발적 결혼 연기	결혼 기피

- 주: 1) 비혼 사유는 비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시된 것으로,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지 는 않음.
 - 2) 사유 앞의 일련번호는 설문지상의 항목 번호를 의미함.

[그림 1] 미혼자 범주 구분

2.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 및 결혼 가치관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 및 출산 의향, 가치관 등에 관한 분석은 $20\sim39$ 세 미혼남녀 1,073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의 대상자는 연령과 성별,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유의 표집되었으며, 목표 표집 대상은 1,000명이었으나조사과정에 73명이 더 응답하였다.

^{8) &#}x27;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육아정책연 구소'에서 실시된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조사"를 의미함.

가. 청년층 미혼 실태

응답자의 74.5%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80%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68.9%만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30대가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은 연령보다는 성별에 보다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인적 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명) 구분 의향있음(결혼연기) 의향없음(결혼기피) $\underline{\chi}^2$ 계(수) 전체 74.5 (799)25.5 (274)100.0(1,073) 성별 남성 80.0 (429)20.0 (107)17.494 *** 100.0(536) 여성 68.9 (370)31.1 (167)100.0(537) 연령 20~29세 76.6 (426)23.4 (130)2.817 100.0(556) 30~39세 72.1 (373)27.9 (144)100.0(517)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미혼 사유(결혼 연기 사유)는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1.7%,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4.1% 순이었다. 이때, 20대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는 응답이 40%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30대 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매우 높았고, 반대로 3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감 때문'라는 응답이 20.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2〉 인적 특성별 결혼 연기 사유 : 1순위 응답 기준

단위: %(명)

구분		-성 30~39세	역 20~29세		전체
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44.0	5.8	47.8	2.4	26.4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0.8	16.0	17.7	47.9	21.7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5	12.1	3.5	9.6	7.3
결혼보다 일이나 자기 계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0.5	3.4	3.0	4.2	2.6

^{**} *p* < .01, *** *p* < .001.

 구분	남	·성	여	성	· 전체
TT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선계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8	2.4	3.9	6.0	3.4
비자발적 결혼 연기 사유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0.9	3.9	0.0	1.2	1.5
소득이 적어서	9.4	11.2	2.0	1.8	6.4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상태라서	9.4	13.1	4.4	5.4	8.3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2.6	20.4	13.8	9.0	14.1
결혼생활과 직장일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0.0	1.0	1.0	0.6	0.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6.3	10.2	10.2	11.4	7.4
기타	0.0	0.5	0.5	0.6	0.4
χ^2	297.484***				
계(수)	100.0(223)	100.0(206)	100.0(203)	100.0(167)	100.0(799)

^{****} *p* < .001.

반면,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결혼 기피 사유)를 살펴보면,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응답이 16.8%,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라는 응답이 14.6% 순이었다. 결혼 기피 사유는성 및 연령에 따라 경향성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다는 응답이 높은데 반해 남성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공동생활에 대한부담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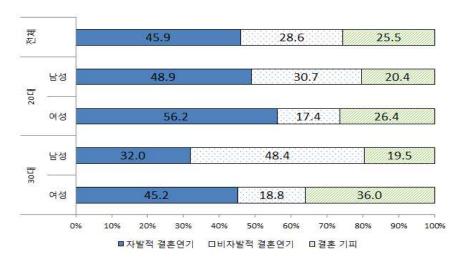
〈표 3〉 인적 특성별 결혼 기피 사유

단위: %(명)

구분 -		남성		여성	
T七	20~29세	30~39세	20~29세	30~39세	선체 전체
결혼 기피 사유					
아무런 이유없이 결혼이 싫어서	5.3	6.0	9.6	8.5	7.7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28.1	32.0	35.6	36.2	33.6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22.8	24.0	6.8	10.6	14.6
직장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3	0.0	4.1	7.4	4.7
자아 계발에 제약이 생기므로	3.5	0.0	4.1	2.1	2.6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	1.8	0.0	5.5	3.2	2.9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14.0	22.0	9.6	7.4	12.0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	15.8	12.0	13.7	22.3	16.8
기타	3.5	4.0	11.0	2.1	5.1
χ^2		37.1	196*		
계(수)	100.0(57)	100.0(50)	100.0(73)	100.0(94)	100.0(274)

^{*} p < .05.

결혼 연기 사유를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발적인 경우와 사회구조적 제약과 관련된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미혼 실태를 재구분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결혼 기피자)의 비중은 30대 여성의 36.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대 여성의 26.4%가 결혼 기피자로 응답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 기피가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는 자발적 결혼 연기가 48.9%로 높은 반면,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48.4%가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로 분류되었다. 요컨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 의향 자체가 없는 비중이 높으며, 20대 남성은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남성은 결혼하고 싶으나 낮은 소득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총 1,073명(남성 20대 280명, 남성 30대 256명, 여성 20대 276명, 여성 30대 261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그림 2] 성 및 연령별 미혼 실태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 청년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이 33.0%였다. 성 및 연령별로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20대 여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이 56.3%에 달해 다른 집단과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꼽고 있으나, 취업자의 경우에는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8.9%에 달해, 일자리 및 경제적 안정이 결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취업 이후에는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4〉 결혼 연기자의 결혼 조건

단위: %(명)

							L71. 70(8)
구분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	사회적 지위가 안정된때	결혼할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기타	계(수)
전체	15.3	39.7	5.3	33.0	5.4	1.4	100.0(799)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23.8	42.6	6.3	23.3	2.7	1.3	100.0(223)
남성 30~39세	13.1	47.6	7.3	24.8	7.3	0.0	100.0(206)
여성 20∼29세	12.3	45.3	2.5	33.0	4.4	2.5	100.0(203)
여성 30~39세	10.2	19.2	4.8	56.3	7.8	1.8	100.0(167)
χ^2			92.641	***			
취업상태							
취업(휴직포함)	10.2	39.3	3.8	38.9	6.4	1.3	100.0(529)
학생(휴학포함)	27.3	43.2	6.8	18.9	3.0	0.8	100.0(132)
구직, 기타	23.2	37.7	9.4	23.9	3.6	2.2	100.0(138)
χ^2			56.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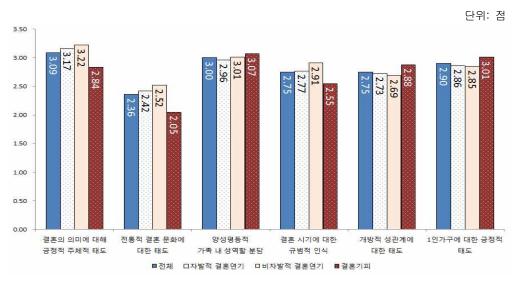
^{***} p < .001.

나. 청년 미혼자의 결혼 가치관 개관

지금부터는 이러한 미스매치가 어떠한 차이에 근거하는지,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조사 문항 중에서 각 영역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여 cronbach's α 값이 가장 큰 조합을 기준으로 선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한 값이다. 또, 조사당시 일괄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섞어서 배치하였는데, 범주별 평균값은 역방향으로 질문한 응답 값을 역코당 한 후 평균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의 범주는 크게 여섯 개로 묶을 수 있으며,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구분된다.

범주별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 문항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으며(3.09점),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 분담 3.00점,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

도 2.90점, 결혼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 2.75점,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2.36점 순이었다. 결혼 기피자들은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3.07점)과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3.01점),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 (2.88점) 문항들에서 높은 동의도를 보이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3.22점),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2.91점),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2.52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 : 자발적 결혼연기자 492명, 비자발적 결혼연기자 307명, 결혼 기피자 274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4점 만점임.

[그림 3] 결혼 의향별 결혼 가치관(평균점수)

인적 특성별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3.15점 > 3.05점), 전통적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2.43점 > 2.28점), 결혼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2.85점 > 2.65점),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2.78점 > 2.72점)에서 높은 동의도를 보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부담(2.90점 < 3.10점), 1인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2.84점 < 2.95점)에서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30대에 비해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3.31점 > 3.07점)과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3.03점 > 2.97점),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2.91점 > 2.88점),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2.77점 > 2.73점),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2.37점 > 2.34점)에서 모두 동의도가 높았으나,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에 있어서만 30대(2.76점)가 20대(2.75점)에 비해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표 5〉 인적 특성별 결혼 가치관 차이

단위: 점

		별	여리	 -
구분 -	<u></u> 남성	여성	20대	30대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	3.15	3.05	3.31	3.07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2.43	2.28	2.37	2.34
양성평등적 가족내 성역할 분담	2.90	3.10	3.03	2.97
결혼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2.85	2.65	2.75	2.76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태도	2.78	2.72	2.77	2.73
1인가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	2.84	2.95	2.91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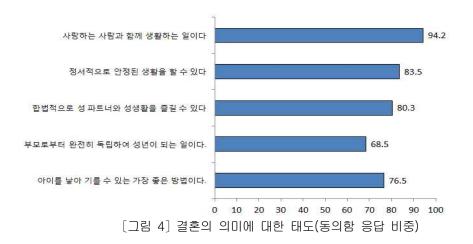
주 : 남성 536명, 여성 537명, 20대 556명, 30대 517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4점 만점임.

이하에서는 세부 항목별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의할 점은 세부 항목별 인식 문항은 각각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와 '대체로 동의함'의 응답 비중을 더한 것으로, 범주별 평균을 산출할 때와는 달리 역방향 응답 값을 역코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도로 이해하면 된다.

1) 결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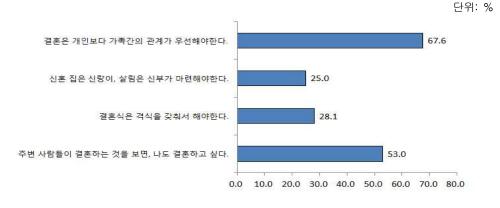
결혼의 의미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항목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94.2%)였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83.5%), '합법적으로 성 파트너와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80.3%),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76.5%) 순이었으며,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성년이 되는 일이다'(68.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즉, 다수의 청년 미혼자들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결혼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혼전 동거 혹은 혼외 자녀에 대한 터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단위: %



2)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미혼 청년들의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동의도는 다른 인식 문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결혼 문화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7.6%가 동의를 하여 크게 낮지 않은 동의도를 보였다. 반면, '신혼 집은 신랑이, 살림은 신부가 마련해야한다'는 질문에는 25.0%만이 동의하였으며, '결혼식은 격식을 갖춰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8.%만이 동의하여, 형식적이고 성대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식 개선이 이뤄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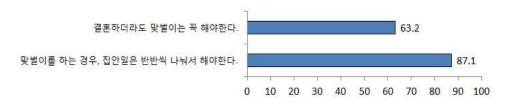


[그림 5]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3)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는 총 3개 문항을 질문하였으나, 내적 일관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2개만을 제시하였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는 질문에 87.1%가 동의하여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결혼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한다'는 질문에는 63.2%가 동의하였다. 지면관계상 인적 특성별 동의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인적 특성별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는 20대 여성(94.6%) > 30대 여성(90.8%) > 20대 남성(82.9%) > 30대 남성(80.1%) 순으로 높았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는 20대 여성(70.3%) > 30대 남성(63.7%) > 30대 여성(62.1%) > 20대 남성(57.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결혼 기피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만혼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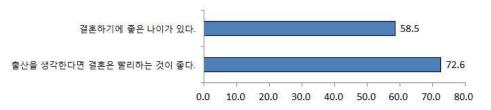
[그림 6] 성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 (동의함 응답 비중)

4)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가 72.6%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8.5%가 동의하였다. 한편, 청년 미혼자들 중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은 51.8%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의 적령기는 평균 32.3세, 여성의 적령기는 평균 29.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10).

⁹⁾ 참고로 제외된 문항은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문항으로 39.9%가 이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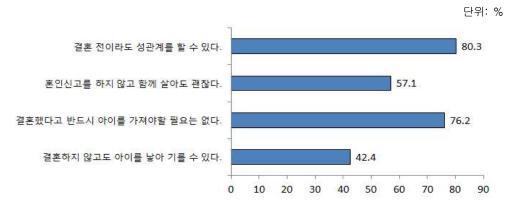




[그림 7]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동의함 응답 비중)

5)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개방적 성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문항에 따라 동의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혼전 성관계에 허용적인 반면 혼전 동거와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를 보였다.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80.3%가 동의한 반면, '결혼했다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76.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함께 살아도 괜찮다'는 57.1%,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42.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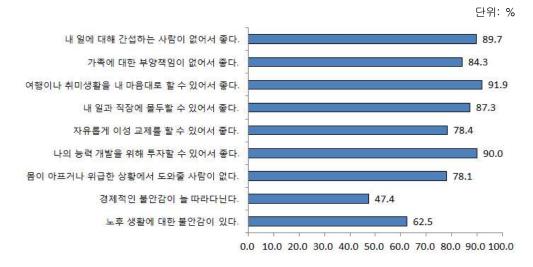


[그림 8]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동의함 응답 비중)

¹⁰⁾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통계표는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104~105를 참조.

6) 1인 가구에 대한 견해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에 동의한 비중이 91.9%였으며,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90.0%, '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9.7%,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87.3%,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어서 좋다' 84.3%, '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78.4% 등 혼자 사는 것의 자유로움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반면, 1인 가구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이는데,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에 동의한 비중은 78.1%,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2.5%,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47.4% 등이었다. 즉, 청년 미혼자들은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것이 보다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신으로서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9]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동의함 응답 비중)

라.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결혼기피 대비 자발적 결혼 연기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연령, 4년제이상 학력, 소득, 가치관 항목 중 일부였다. 먼저 30대 청년은 20대에 비해 자발적 결혼 연기 확률이 낮으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는 고졸이하학력자에 비해 결혼 기피자가될 확률에 비해 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

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청년들은 1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비해 자발적 결혼 연기 확률이 높았다. 결혼 관련 가치관 중에서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우에 자발적 결혼 연기 확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역할분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와 1인 가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자발적 결혼 연기자 대비 결혼 기피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표 6〉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base: 결혼기피)

N = 1.073

	7.11	자발적 결	혼 연기	비자발적 경	<u>별혼</u> 연기
	下 证	coef.	p > z	coef.	p > z
성별(남성 = 1)		-0.112		1.062	***
연령(30대=1)		-0.934	***	-0.139	
커긔	전문대졸업이하	0.116		0.317	
	4년제대학졸업이하	0.723	**	0.540	+
(기간, 포필기에)	지원 (coef. de la coef. de la c	1.620	***	1.502	**
	100~199만원	0.045		0.364	
연령(30대=1) 학력 (기준:고졸이하) 소득 (기준:100만원 이하) 취업여부(취업=	200~299만원	0.925	**	0.871	*
	300~399만원	0.919	*	0.572	
	400만원이상	1.027	*	0.486	
취업여부(취업=	1)	0.416		0.366	
	대도시	0.278		0.127	
	중소도시	0.030		-0.270	
		1.241	***	1.245	***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0.880	***	1.025	***
가치관	양성평등적 가족내 성 역할분담	-0.389	**	-0.017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0.002		0.173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0.221		-0.453	*
	1인 가구에 대해 긍정적 태도	-0.694	**	-0.559	*
상수		-2.080	+	-5.051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비자발적 결혼 연기의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성별이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 기피자가 되기보다는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고졸이하 학력자에 비해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으나, 소득에 있어서의 유의한 효과는 200~299만원에 속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사라졌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를 가진 경우와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우에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으며,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1인가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비자발적 결혼연기자가 되기보다는 결혼 기피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컨대, 학력이 높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전통적 결혼문화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1인 가구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결혼 기피자가 되기보다는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한편, 30대 대비 20대일 때, 고소득자일 때,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도가 낮을수록 (결혼 기피자 대비) 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개방적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결혼 기피자 대비)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3. 청년 미혼자의 출산 의향과 가족 가치관

가. 청년 미혼자의 출산 의향 및 자녀 필요성

전체 응답자 중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5.0%, 낳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였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 (80.2%)이 여성(69.8%)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모두 75% 내외의 출산 의향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인적 특성별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계(수) 점체 25.0 (268) 75.0 (805) 100.0(1,073) 성별 남성 19.8 (106) 80.2 (430) 100.0(536) 15.458 여성 69.8 (375) 100.0(537) 30.2 (162) 연령 20~29세 24.5 (136) 75.5 (420) 0.164 100.0(556) 30~39세 25.5 (132) 74.5 (385) 100.0(517)

성 및 결혼 의향에 따른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출산 의향이 가장 높으며, 결혼 기피자는 출산 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 우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9.5%, 자발적 결혼 연기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8.1%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 *p* < .001.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90.7%, 자발적 결혼 연기자의 84.6%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결혼 기피자의 경우에는 남성의 45.8%, 여성의 33.5%만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성 및 결혼 의향에 따른 출산 의향

단위: %(명)

	구분	낳을 생각 없음	낳을 생각 있음	계(수)	χ^2
	전체	25.0 (268)	75.0 (805)	100.0(1,073)	
	자발적 결혼연기	11.9 (26)	88.1 (193)	100.0(219)	
남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10.5 (22)	89.5 (188)	100.0(210)	
	결혼 기피	54.2 (58)	45.8 (49)	100.0(107)	272 000 ***
سالند	자발적 결혼연기	15.4 (42)	84.6 (231)	100.0(273)	272.000
여성	비자발적 결혼연기	9.3 (9)	90.7 (88)	100.0(97)	
	결혼 기피	66.5 (111)	33.5 (56)	100.0(167)	

p < .001.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울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28.7%로 다음을 이었다.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는 14.9%였으며, '현재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8%였다. 인적 특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과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남성의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았으며 특히 남성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의경우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9〉 인적 특성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2711 70(8)
구분	부부관계 에 집중하고 싶어서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경제적으 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5.2	7.8	28.7	37.3	2.2	14.9	3.7	100.0(268)
성 및 미혼 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11.5	15.4	26.9	26.9	0.0	19.2	0.0	100.0(26)
남성바쁜적결환기	4.5	9.1	45.5	27.3	4.5	9.1	0.0	100.0(22)
남성 결혼 기피	6.9	8.6	34.5	27.6	3.4	15.5	3.4	100.0(58)
여성 지발적 결혼연기	7.1	7.1	23.8	40.5	0.0	19.0	2.4	100.0(42)

			-					
구분	부부관계 에 집중하고 싶어서	현재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경제적으 로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수)
क्षं भग्नेष्ट्र वृष्टि।	22.2	0.0	33.3	44.4	0.0	0.0	0.0	100.0(9)
여성 결혼 기피	0.9	6.3	24.3	4 5.0	2.7	14.4	6.3	100.0(111)
χ^2			33	3.172				
성 및 연령별								
남성 20~29세	6.8	15.3	39.0	23.7	1.7	11.9	1.7	100.0(59)
남성 30~39세	8.5	4.3	29.8	31.9	4.3	19.1	2.1	100.0(47)
여성 20∼29세	5.2	5.2	23.4	4 5.5	0.0	15.6	5.2	100.0(77)
여성 30~39세	2.4	7.1	25.9	42.4	3.5	14.1	4.7	100.0(85)
χ^2				22.584				

응답자 전체에게 출산 및 양육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안정'이 77.7%로 압 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개선'이 34.4%, '배 우자와 가사나 육아 분담'이 32.2%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개선과 배우 자와 가사 및 육아분담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합할 경 우 68.6%로, 미혼 청년들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 기반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인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 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30대 여성의 경우에 응답 비중이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 가정 양립 기업 문화의 개선과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30.1%가 응답한 반면,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분담에 대해서는 18.0%만이 응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 는 결혼 적령기인 30대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보다 중요한 조 건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 끼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10〉연령 및 학력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조건 (1+2순위)

단위: %(명) 배우자 사교육 안전한 자녀에 와 일 가정 조건과 경제적 비가 대한 보육 구분 가사나 양립 기업 무관하 기타 계(수) 안정 줄어 시설 현금지원 육아 문화 개선 게 출산 들면 증가 증가 분담 점체 77.7 32.2 12.6 15.4 34.4 11.6 14.5 1.5 200.0(1,073)

성 및 연령별

		배우자 와	사교육	안전한	일 가정	자녀에			
구분	경제적 안정	가사나 육아	비가 줄어 들면	보육 시설 조기	양립 기업 문화 개선	대한 현금지원 증가	무관하 게 출산	기타	계(수)
		분담	글빈	증가		च्या			
남성 20~29세	80.4	30.0	13.6	12.9	29.3	13.2	19.3	1.4	200.0(280)
남성 30~39세	81.6	<u>18.0</u>	19.5	20.7	30.1	11.7	18.0	0.4	200.0(256)
여성 20∼29세	<i>7</i> 9.0	40.9	8.0	10.5	40.6	9.8	9.1	2.2	200.0(276)
여성 30~39세	69.7	39.5	9.6	18.0	37.5	11.9	11.9	1.9	200.0(261)
χ^2		117.685 ***							

주: 복수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전체 200%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한다'가 14.8%, '있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43.0%, '없어도 괜찮다'가 36.2%,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6.1%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7.8%에 그쳤다. 결혼 의향에 따라서는 결혼 기피자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도 1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결혼 연기자의 경우에는 있는 것이 낫다는 응답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5%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표 11〉성 및 결혼의향별 자녀 필요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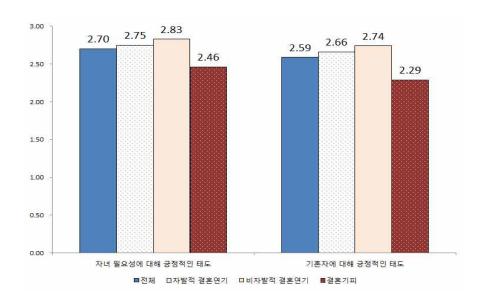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낫다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이 낫다	계(수)	χ^2
전체	14.8	43.0	36.2	6.1	100.0(1,073)	
성 및 미혼상태별						
남성 자발적 결혼연기	28.8	49.3	21.5	0.5	100.0(219)	
남성 비지발적 결혼연기	23.3	51.4	24.8	0.5	100.0(210)	
남성 결혼 기피	2.8	19.6	59.8	17.8	100.0(107)	325.145 ***
여성 자발적 결혼연기	11.7	49.8	35.2	3.3	100.0(273)	
여성 비지발적 결혼연기	9.3	<i>67</i> .0	21.6	2.1	100.0(97)	
여성 결혼 기피	1.8	13.8	64.7	19.8	100.0(167)	

^{***} p < .001.

나. 청년 미혼자의 가족 가치관

청년 미혼자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2.70점, 기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59점이었다. 자녀 필요성 및 기혼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인 경우에 각각 2.83점, 2.74점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결혼 기피자의 경우에는 각각 2.46점, 2.29점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 *p* < .01, *** *p* < .001.



[그림 10] 결혼 의향별 가족 가치관(평균점수)

인적 특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2.78점 > 2.62점)와 기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2.70점> 2.48점) 점수가 높았으며, 20대가 30대에 비해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았다. 한편, 인적 특성과 무관하게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기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12〉 인적 특성별 결혼 가치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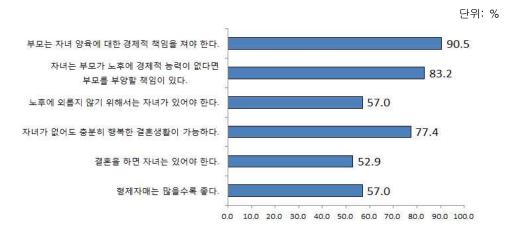
단위: %(명)

				,
	성	별	연현	 정별
一	남성	여성	20대	30대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2.78	2.62	2.72	2.67
기혼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2.70	2.48	2.64	2.54

주: 남성 536명, 여성 537명, 20대 556명, 30대 517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1) 자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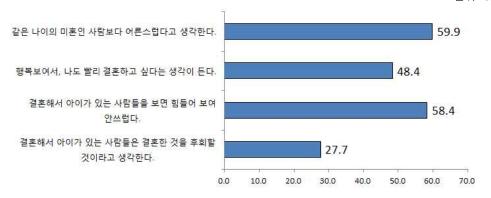
세부항목별로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항목에 동의 하는 비중이 90.5%로 대다수의 청년 미혼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녀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항목에 83.2%가 동의하였으며,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물음에 77.4%가 동의하였다. 한편,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와 '형제 자매는 많을수록 좋다'는 질문에는 57.0%의 청년 미혼자가 동의하였고,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52.9%만이 동의하였다. 즉,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를 보인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특히 경제적 책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11] 자녀에 대한 태도 (동의함 응답 비중)

2) 기혼자에 대한 태도

한편, 기혼자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가족 가치에 관한 문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혼자가 같은 나이의 미혼인 사람보다 어른스럽다'라는 견해에는 59.9%가 동의하여 비교적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나, '행복해 보여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에 동의한 비중은 48.4%에 그쳤다. 반대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8.4%가 동의하였으며,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27.7%만이 동의하여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즉, 청년 미혼자들의 기혼자에 대해 견해는 결혼 자체를 후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단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2] 기혼자에 대한 태도 (동의함 응답 비중)

다. 청년 미혼자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청년 미혼자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로짓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때, 결혼 의향이 출산 의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혼 의향(있음/없음으로 구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이 <모형 1>이며, 반대로 결혼에 대한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 <모형 2>이다11).

먼저 모형1의 결과, 청년 미혼자들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취업여부, 결혼 의향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출산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출산 의향이 높았다. 출산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혼 의향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 의향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 의향이 아닌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모형 2>의 결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고졸이하 학력자에 비해 출산 의향이 높으며, 취업자인 경우 출산 의향이 높았다. 결혼 및 가치관 문항 중에서 결혼 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녀필요성과 기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의향이 출산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는 있으나, 결혼 가치관과별개로 출산 의향은 자녀 필요성과 기혼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¹¹⁾ 결혼 의향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서로 상관이 높으므로, 각각의 모형을 추정함.

〈표 13〉청년 미혼자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기준: 출산 의향 없음)

N = 1.073

	구분 -	모형	1	모형	2
	· [七	coef.	p > z	coef.	p > z
성별(남성=1)		0.373	*	0.161	
연령(30대=1)		0.041		0.193	
학력	전문대졸업이하	0.354		0.388	
	4년제대학졸업이하	0.192		0.676	**
(기준:고졸이하)	대학원이상	0.244		1.147	**
えて	100~199만원	-0.452		-0.312	
소득 (a) 조.100미.0)	200~299만원	-0.490		-0.090	
(기준:100만원	300~399만원	-0.485		-0.160	
이하)	400만원이상	-0.450		0.054	
취업여부(취업=1	L)	0.662	*	0.666	**
⇒J ∖-H	대도시	-0.136		0.206	
지역	중소도시	0.187		0.471	+
결혼의향(결혼의	향 있음=1)	2.413	***		
	결혼의 의미			0.353	+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0.005	
	양성평등적 가족내 성 역할분담			0.094	
가치관	결혼 시기에 대한 규범적 인식			0.218	
	개방적 성관계에 대한 견해			-0.145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0.001	***
	태도			2.281	^^^
	기혼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1.889	***
상수		-0.972	**	-12.151	***

⁺ p < .1, * p < .05, ** p< 0.01, *** p < .001.

4. 청년 미혼자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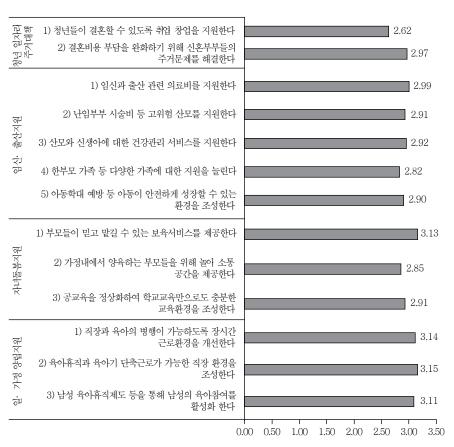
청년층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청년 미혼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 주거대책이 결혼하는데 더 도움이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10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3.08점으로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청년 일자리 대책 중에서 청년 미혼자들로부터 가장높은 지지를 받은 결혼 지원 정책은 '정규직 채용을 위한 세제·재정지원 정책강화'(2.84점)이었다.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 제외하고,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그림 13] 청년 대상 결혼 및 출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저출산 정책 중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다. 청년 일자리·주거대 책이 출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 항목별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이 3.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장시간 근로 환경개선'이 3.14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3.13점, '남성 육아휴직 제도 등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가 3.11점 순이었다. 반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지원'은 2.6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 평균 점수는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산출,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그림 14] 저출산 대책의 도움 정도(평균 점수)

5.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청년 미혼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혼전 동거나 혼외 자녀를 터부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결혼 지원 정책은 크게 일자리 지원 정책과 주거 지원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주거 지원 정책이 일자리 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판단된다.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결혼을 위한 선결과제로 급선무이긴 하나,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 발현될 뿐 아니라 취업이 반드시 출산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반면, 일자리 주거 지원 정

책은 결혼 직전의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이들 청년층의 결혼 지원 정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다소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의향과 무관하게 청년 미혼자들은 대다수가 출산과 양육의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을 1순위 조건으로 꼽고 있었으며, 결혼을 위한 조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라고 응답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조건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90%가 동의를 한 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62.6%가 동의한 점 등에서도 재확인된다. 반면,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50%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즉, 청년 미혼자들은 결혼 연기자이든 결혼 기피자이든 가족됨 혹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조건을 선결과제이자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 연기자의 경우에는 결혼 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가족 형성에 대해 궁정적 태도가 공존하는 반면, 결혼 기피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궁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인다. 즉, 효과적으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됨과 자녀 양육에 따른 궁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인식개선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청년 미혼자들의 다수는 출산을 위한 양육의 조건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가장 우선시 했으며, 다음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꼽았다. 또한, 미혼 청년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 중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욱 선호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결혼 기피 혹은 자발적 결혼 연기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여성의 출산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가족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게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체감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기업 특성에 따른 편차의해소와 제도의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의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혼 청년들의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 펴보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의 분담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도 80%대의 높 은 동의도를 보이긴 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동의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남녀 간의 가정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인식 차이가 여성의 결혼 기피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양성 평등적 가족관의 정립과 확산은 30대 미혼 여성들의 결혼 기피 경향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 양육 시간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때, 남성의 육아 참여가 반드시 육아 휴직 등의 육아전담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남성 육아 참여도를 제고하는 지원이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남성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와 함께 하는 아빠 부모교육 등 부모가 함께 키우는 양육환경과 육아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도희(2012). 청년 1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 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6.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57-81.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희·권현수(2015).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 영향요인: 2012 사회조사 기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606-616.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 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통계자료]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 _cd=1428(2016.11.30. 인출).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일반혼인율, http://kosis.kr/statHtml/stat Html.do?orgId=101&tblId=DT_1B83A34&conn_path=I2 (2016.12.02. 인출)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1995~2015년),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kosis.kr/sta tHtml/stat 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2016.12.0 2. 인출)



발표 2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김혜준 대표 | 함께하는 아버지들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2017. 4. 7

김혜준 (대표 /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help@fathers.or.kr



목차

-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價値)
-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實態)
-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發展方向)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 - 미시적(微視的) 가치

• 아버지 본인의 행복

"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를 키우는 양 육스트레스보다는 행복감이 높더라"는 조 사결과(표4)는 일반화시켜도 좋을 것



(표 4) 아버지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184)

구 분	하위변인	M	SD	범위(최소값-최대값)
	아버지개인의 고통	2,37	,49	1,33-3,92
아버지	아버지-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76	.39	1,17-2,58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2,40	.41	1,33-3,42
	양육스트레스 전체	2,18	.35	1,33-2,89
	자아수용	3,20	.29	2,50-4,00
	긍정적 대인관계	3,40	.38	2,43-4,43
	자율성	2,98	,32	2,14-3,71
아버지 행복감	환경에 대한 지배력	3,42	,35	2,67-4,33
	삶의 목적	3,20	,29	2,60-4,00
	개인적 성장	3,41	,36	2,25-4,25
	행복감 전체	3,25	.19	2,88-3,93

박은마·이석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제19권 제2호, 2015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 - 미시적(微視的)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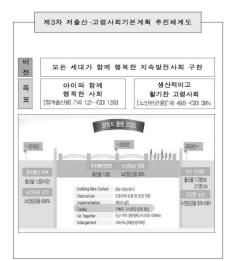
- 아버지효과
-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후 자녀의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됨.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높을수록 아이의 학업성취도, 사회성, 인성, 성취욕구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자아 존중감과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효과
-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 뿐 아니라 가족관계, 직장 생활 까지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 - 거시적(巨視的) 가치

- 공동체의 건강성 제고
- 행복한 아버지 → 행복한 가정
 - → 건강한 지역공동체 → 건강한 국가
- 저출산 극복
- 아버지 참여 → 일가정양립
 - → 출산저항 극복 → 인구 안정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도자료 p.4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자녀를 돌보는 시간

주중 :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 아버지 본인은 2~4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주말: 아버지 본인은 10시간 이상(영아, 유아 아버지)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양육시간 으로 4~6시간 미만(영아), 2~4시간 미만(유아, 초등 아버지) 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버지 본인은 자녀양육에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 2016-16, 육아정책연구소, 2016)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7.3.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23.4%)', '성별 임금격차 (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16.4%)을 꼽았다.

여성은 '가사 및 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27.4%)', '성별 임금 격차(26.7%)', '여성에 대한 폭력(15.4%)'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성은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21.3%)', '가사 및 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19.5%)', '성별 임금 격차(1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
- → 51.9%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싶다'
- → 19.4%는 '가사 시간을 늘리고 싶다'
- → 32.0%는 '돌봄 시간을 늘리고 싶다'
- 특히 남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1	단위: %)
구 분		근로 시간		가사 시간		돌봄 시간	
1 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가구	줄이고 싶 다	25.4	35.0	22.2	7.0	7.5	1.9
전세 기구	늘리고 싶 다	14.3	10.7	5.4	11.4	7.1	12.1
미성년 유자녀 가	줄이고 싶 다	25.0	51.9	32.0	5.4	21.6	2.6
구	늘리고 싶 다	17.8	3.4	4.8	19.4	14.3	32.0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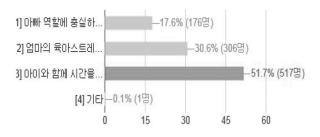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들, 2015.1)

- I.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아빠 10명중 7~8명이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직장내 눈치'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 대상자라면 신청하겠다 : 배우자출산휴가(87.2%), 육아휴직(72.8%)
- 배우자출산휴가 못쓰는 이유 : 직장내 눈치(40.6%), 회사 사정상 아예 기회가 없어(21.7%) 順
- 육아휴직 못쓰는 이유 : 직장내 눈치(47.3%), 인사상 불이익(31.4%), 기회 없어서(11.8%)
- I-1. "육아휴직이 업무생산성 높인다!": 아빠들 생각(58.7%)
- 낮아질 것(9.3%), 별 영향 없을 것(32%)
- I-2. 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더 원해!
- 300만원미만(77.3%), 300~500만원(74.7%), 500~700만원(67.9%), 700만원이상(64.7%) 순
- I-3. '육아휴직'(58.7%)이 '배우자출산휴가'(53.8%)보다 업무생산성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
- 표. '아빠의 달' 제도의 최대 수요자인 30대 기혼 직장 남성의 66.8%가 이 제도를 몰라!
- 잘 알고 있다(11.5%), 들어는 봤다(32.6%), 모른다(55.9%)
- Ⅲ. 기혼 직장 남성의 82.2%가 아버지(부모)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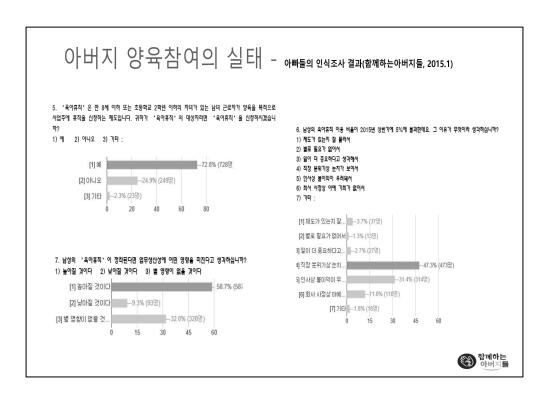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들, 2015.1)

- 1. 다음은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아빠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더욱 긍정적인 자아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 2)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를 줄여 부부간 유대감이 높아진다
- 3)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풍성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자극을 준다
- 4) 기타 :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틄, 2015.1) 2. '배우자출산휴가' 제도에 따라 아내가 출산을 할 경우에 남편은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자라면 '배우자출산휴가' 를 이웃하시겠습니까? 1) 에 2) 아니오 3)모르겠다. 3. (2번의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을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별로 필요가 없어서 2)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 직장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 [2] 아니오 -6.9% (69명) 4)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서 5) 회사 사정상 아에 기회가 없어서 [3] 모르겠다 -5.9% (59명) 6) 기타 : [1] 별로 필요가 없어서 -- 11.6% (8명) 4. 3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이 업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2] 일이 더 중요하기... -2.9% (2명) 3] 직장 분위기상 눈치... -40.6% (28명) 1) 업무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2) 업무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17.4% (12명) 4] 인사상 불미익이 우... 3)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5] 회사 사정상 아예... -21.7% (15명) 1] 업무생산성을 높여... -53.8% (538명) [6] 기타 -5.8% (4명) 0.0 12.5 25.0 37.5 50.0 [3] 별 영향이 없을 것... -40.0% (400명) 함께하는 아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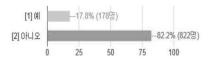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들, 2015.1) 소득수준과 육아휴직 선호도 : "육아휴직 대상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제 - 용명자수723 제 - 문양자(전경) 30 - 전경인 이상 30 - 전경인 30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들, 2015.1)

기타 - 응답자수: 23

10. 귀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모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에 2) 아니오



- ▲아니오 보기에 대한 선택(82.2%)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서 예(1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50대 이상(87.2%), 300만원 미만(83.3%) 응답자가 아니오 보기를 주로 선택하였습니다.
- ▲아니오 보기는 50대 이상(67.2%)의 응답률이 타 집단 대비 높은 반면, 예 보기는 상대적으로 40대(24.8%) 응답자에게서 높았습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 아빠들의 인식조사 결과(함께하는아버지틄, 2015.1)

- 아빠들이 인식은 많이 변했고
- 제도적으도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
- 사회전반적 분위기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
- But 실제 체감 조건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아빠들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갈등(needs & 현실 간 간극)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 직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
-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 → 아버지교육의 기회 확충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

- 1. 부성(父性)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o 부성의 특성을 간과한 채, 아버지로 하여금 제2의 엄마가 되라는 잘못된 신호가 나오기도 한다.
- 부성과 모성의 차이는 엄존한다.
- 남성과 여성의 양옥에 대한 태도, 인식, 실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아버지 본인은 주말에 영유아 자녀를 10시간 이상 돌본다고 응답했지만, 배우자는 4~6시간(영어), 2~4시간(유어) 정도 돌본다고 응답한 점이다. 어느 현쪽이 거짓말을 한다기 보다는 자녀들봄이나 자녀와의 놀이 등에 대한 생각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의 일정 부분은 부부가 같이 이수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상호 이해하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이운전 김어를 임준병,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 2016-16, 육아정적연구소, 2016)
- o 본능적 속성이 강한 모성과 달리 부성은 매우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구성될 수 있는 문명의 소신이다. 즉 자식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결단과 이성적 각성이 뒷받침돼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부성의 본질이다.
- 인정과 책임을 본질로 삼으면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부성의 속성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와 다소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 부성에는 스스로 각성하는 과정(자율성)이 매우 중요하여, 타율과 소외는 특히 부성의 양과 질을 훼손시키기 쉽다.
- o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에 있어서도 기초연구와 질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
- 격관적이고 수량회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양적 연구 뿐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시각 또는 그와 관련된 시각에서 자연적인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이미현 최혜순, 「아버지 양육점에 관련 연구동항 분석」, 청소년화연구 제 21권 제7호, 가전대학교, 2014)
- 정부의 연구 지원정책에도 이런 취지의 배려가 필요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

※ 부성에 대한 성찰1 : 부성의 기원

이처럼 아버지라는 존재에게는 아이가 내 자식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매우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부성에가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자 루이지 조야(Luigi Zoja)는 자연발생적이고 감성적인 모성과는 달리, 부성에는 상당한 의지와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부성애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성애는 야만속에서도 존재하지만 부성애는 문명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부성애는 자식이 탄생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되고 구성되어야 하며, 자연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배워야 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의 결단이며 결연을 수용하는 행위로써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문 영속에서 탄생한 정신적인 각성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성 문화인류학자 Margaret Mead는 문명이 시초에 남성이 처음으로 여성과 그녀의자식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순간을 부성이 탄생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보았다. 또 그녀는 부성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제도로 인식했다. 본능을 억제함으로써 탄생한 정신적인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는 의례(Suspicere)를 거쳤는데, 이것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옛날 홍길동도 아버지의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도 비슷한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최초의 관계이며 외부 세계와는 거의 동떨어진 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 시작부터 적어도 세사람 이상이라는 집단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다. 부자관계는 이렇게 첫 출발부터 이미 사회의 일부분이다. 사랑과 정착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 인 권력에 기초해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속성을 띠는 것이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

※ 부성에 대한 성찰2 : 부성의 패러독스 및 불안정성

어머니로서의 성공은 자식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아버지의 성공은 자식들과의 상호작용 못지않게 사회와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요한 건 이 두 영역에 포함된 법칙들이 전혀 다른 작동원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자식은 없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주는지가 유일한 잣대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정이 다르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사랑이나 청렴함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은 어머니를 향한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아버지가 강한 사람이고 승리자이기를 바란다. 착하고 올라르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면서도 승리자이라면 좋을 것이지만, 만일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 역시 정당한 행동을 했지만 밖에서 실패한 아버지보다 노골적인 권력에 기초해서 승리를 쟁취한 아버지를 훨씬 더 선호해 왔다. 세익스피어 역시 '리어왕 '을 통해 권력과 명예를 잃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버림받는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식들의 상반된 기대는 아버지로 하여금 억누르고 있던 야수적 공격성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글에서 먹이 감을 낚아채기 위해 날세웠던 이빨과 발톱은 연약한 자식들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부 깊숙이 숨겨야 한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을 자유롭게 모드 전환시키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부성이 가지는 근본적 불안정성이다. 문득 문득 자식들에게도 드러내는 아버지의 공격성과 완고함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버지라는 존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

2. 도구적 아버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 o 도구적 발상 <-- 여성중심 사고 + 양적(공급자) 관점
-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천이 어려우며 특히 <u>남성의 활용도</u>는 매우 낮은 실정"(기본계획 8쪽)
- o 여성적 상상력에 포획돼 있다
-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여전하여"(기본계획 24쪽)
- 아버지 논의에 아버지가 잘 안보인다 ; 연구, 정책, 교육현장 모두에 남성, 아버지의 목소리가 결핍돼 있다. 그 결과 아버지들의 needs, 자발성, 내재동기, 에너지가 담기지 못한다.
- ㅇ 공급자 관점 내지 양적 접근에 매몰돼 있다
- 개별적 수요자의 눈높이가 반영되지 않고 총량적 지표관리의 대상만 남아
- 그 결과 "모든 것(예산, 장소, 프로그램, 진행자)이 준비돼 있는데, 들을 사람이 없다!" → 도구적 발상의 참담한 결과
- o 도구적 아버지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 우선 양육뿐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아버지를 참여시켜야 한다. 연구, 정책입안, 현장실행에 남성이자 아버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플러스 프로젝트의 주고객인 남성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중년남성은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화한다. 이들 중에서 모범적 아버지들을 발굴하여 참여시키자는 것, (이쿠지, 함빠)
- 다음으로는 공급자 관점의 양적 접근에서 수요자 관점의 질적 접근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파는 곳에서 표사는 곳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

3. 아버지의 내재동기를 끌어내자

- o 요사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노라면 마치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위력을 발휘했던 치마바람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옮아온 것 같은 느낌이든다. 정부가 엄마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 o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익히 지적돼 왔고, 그래서 강조되었던 것이 '자기주도학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말할 때에도 동입하게 강조돼야 할 것 같다.

'Drive'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동기3.0을 이야기하면서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으로 상징되는 외재동기에 대비되는 개념인 내재동기는 자율성(Autonomy) 목적(Purpose) 숙련(Mastery)으로 작동된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성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 스스로의 선택과 변화를 기다리지 않은 채 밀어 부쳐온 기능론적 아버지역함, 공급자관점의 양적인 처방은 내짜동기의 작동을 막고 있다. – 이것이 아버지들의 노동시간만 줄여주면 자동적으로 양육참여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부를 중심으로 공급자관점의 양적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투입된 자원과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원인이 아닐까?

내재동기를 작동시키는 한가지 예르써 필자가 2015년 방문했던 일본의 아버지단체 '파더링 저편에서는 추진 중인 '이쿠보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육아하는 아빠를 지칭했던 '이쿠맨'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직장은 여전히 육아하는 아빠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자 안도 테츠야 대표는 이쿠맨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보스에 주목했다. 그리고 직장 보스들의 내재동기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보스들에게 미래지항적인 보스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빠곡한 우리의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비교해 불만한 자점이다.

o 아버지들의 내재동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축제를 늘려가야 한다. 규범적이고 획일적인 아버지상이 아니라 현실속의 다양한 아버지 모습에 훈장을 주자는 것이다. 교육 못지않게 박수, 훈장, 축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사)함께하는아버지들은 2013년부터 '아빠자랑대회', '아버지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발표 3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

유해미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출산 및 부모 지원단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지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인구 동향에 의하면, 2016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2백 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4.7%(4천7백 명) 감소하였고(그림 1참조), 2016년 4분기 출생아 수는 8만9천1백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3천 명 (-12.7%)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6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26명으로 전년 동기에비해 0.03명이 감소하였다(통계청, 2017a: 3). 게다가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년 동기에비해 17개 시도 모두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7a: 4).

단위: 천명 45.0^(천 명) ❤ 2014년 2015년 **☞** 2016년p 40.0 35.0 34.9 34.4 33.9 33.9 32.9 30.0 31.5 ('14.12월) 3만 2천 7백 명 30.3 ('15.12월) 3만 1천 9백 명 ('16.12월) 2만 7천 2백 명 2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통계청(2017a). 보도자료: 2016년 12월 인구 동향(2017. 2. 23). p. 2.

[그림 1] 전국 월별 출생 추이(2014-2016)

지난해부터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8월에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데이어, 올 초에는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7: 1). 지난 해 8월 보완대책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생아 수의 감소의 반전

을 기하여 위해 난임 지원 및 안심출산에 보다 집중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6a: 6). 최근 발표에서 정부는 경제계, 지역사회 등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핵심 과제로는 1) 청년의 고용안정, 2)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3) 돌봄 사각지대 해소, 4) 일·가정 양립 일상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2017년 저출산 분야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부문은 총 50,141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37.8%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16b: 2).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방침은 기존 대책들에 비해 단시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장려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계획은 저출산 원인 중 만혼화와 비혼화에 보다 집중하여 기혼가구의 대상의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대책으로 확장하고,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과 사회인식의 변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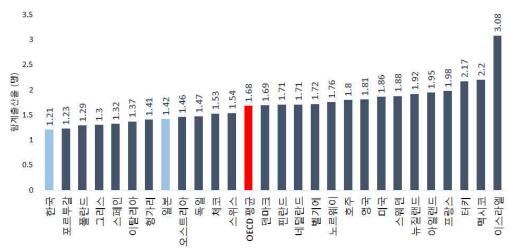
여기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이 10여년을 넘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시행 2차년을 맞고 있으나 저출산 위기가 해소되기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최근의저출산 대응정책 기조 변화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갖는 특수성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을 진단하고, 그 방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바를 제시할 것이다. 이때 저출산 양상 및 그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와의 비교에 주력하였다.

2. 저출산 추이 및 영향 요인의 특수성

OECD 국가 전반, 특히 일본 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그 영향 요인의 특수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출산 추이의 특수성

OECD family database(2016)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14년 기준 평균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1.68명으로, 2008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이 3.08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1.21명으로 가장 낮은데, 이는 OECD 평균(1.68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2 참조).



자료: 유해마조속안장경화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교육부육이정책연구소 p. 13.

[그림 2]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4)

196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이후로는 상당수의 OECD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이 2.1명(인구 대체율) 이하를 나타낸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합계출산율 추이는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201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는 1995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유해미·배윤진·김문정, 2014: 24).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는 저출산 위기에 처한 일본과 비교하여도 상이하다. 196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명으로 높은 수준인 데 반해, 같은 해 일본은 인구 대체율(2.1명) 이하인 2명으로 보고된다. 한국은 1983년에 이르러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이하로 하락하여, 1984년에는 최초로 일본(1.81명)과 OECD 평균 합계출산율(1.98명)보다 낮은 수준(1.74명)을 보였다. 이후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다가, 1990년에는 일본의 합계출산율(1.54명)을 약간 넘어서는 1.57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다시 한국을 앞질러 2014년까지 1.33~1.42명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1.3명에서 1.21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유해미·조속인·장경희·박은영, 2016: 14-15)(그림 3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외 국가들에 비해 그 하락 속도가 급속히 빠르

고, 의미있는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과도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현상이 지난 15년간 지속되는 현상도 이례적인데,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초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난다(대한민국정부, 2016: 10).

단위: 명



자료: 유해마조속안장경화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p. 15.

[그림 3] 한국/일본/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비교(1960-2014)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제의 위축과 군사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호론자 등은 자국의 인구 감소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 곧 인구 고령화를 야기한다는 점은 저출산 대응이 시급한 정책 과제임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노인부양비의 증가 즉 급증한 노인 인구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나. 저출산 원인의 특수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노동(work), 결혼과 출산간의 관계, 양성평등, 일하는 부모 대상 보육서비스와 근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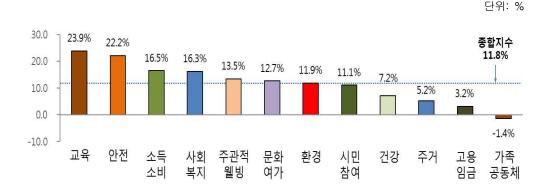
간 단축 또는 중단, 교육제도, 젊은 가구의 주거 이용가능성(availivility), 자녀 대상 정부 보조금 수준, 이민정책 등이 지적된다(Rindfuss R. R., and Minja K. C., 2015: 5-11).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대부분의 요인들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논의된다. 즉 장시간 임금노동은 가정내 부모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하며, 혼외 출산율이 낮고, 가족내 젠더 불평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떠안고 있 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제공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나 라에서는 이용가능한 기관보다 수요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일 가정 양립지원에서는 기 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근 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기업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 여건임을 말해준다. 특히 일 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방해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들수 있다. 일본에서도 시간외 근무는 남성의 가정내 육아와 가사 참여를 저해하여 여성의 이중고통을 초래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된다(유해미 외, 2016: 78). 일본은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9년에는 연간 1,714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스웨덴의 1,621시간, 프랑스의 1,479시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된다. 게다가 일본에서 자녀를 출산 양 육하는 30대와 40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2015년에 약 17%에 달하여 (유해미 외), 장시간 근로는 일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 밖에도 유연 한 교육제도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종학력이 직 업 선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므로, 좋은 대학에 입학 하기 위한 경쟁으로 과도하게 내몰리는 실정이다(Rindfuss R. R., and Minja K. C., 2015: 9).

이처럼 일본과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은 유사하나, 단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일찍이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층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화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본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한 비정규직은 2015년에 전체근로자의 37.5%를 차지하여, 1984년 15.3%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특히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시기인 25세부터 44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유해미 외, 2016: 69).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곧 저임금화를 초래하여 가족형성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일본의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선에 그치기 때문이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74). 20대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997년에는 연봉 300만 엔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200만엔 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저임금화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회에서와 같이, 결혼을 통한 출산이 주를 이루므로, 불안정하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결혼 지연이나 포기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의 진단에서 출산, 양육기에 속하는 연령대의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수준의 변화는 향후 보다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들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관련하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 평가 결과"는 저출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통계청, 2017b). 2006년 대비 2015년을 비교하여 영역별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12, 주거와 고용 및 임금 부문이 평균에 비해 낮은 저조한 개선 정도를 보이며, 가족공동체 부문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주거와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미흡하였다는 현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들 개선의 미비가 지난 10여년 간의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통계청(2017b). 보도자료: "국민의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 결과(2017. 3. 15). p. 1.

[그림 4] 국민의 삶의 질 영역별 종합지수 증가율: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률

¹²⁾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2006년 기준(기준년)을 100으로 한 해당 연도의 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영역 종합지수를 만들고, 이들 영역 종합지수를 다시 단순 평균하여 삶의 질 종합지수를 작성(통계청, 2017b: 1).

3. 저출산 대응의 방향과 주요 과제, 변화 및 함의13)

지난 10여년 간의 저출산 대응의 방향 및 전략, 그리고 정책 과제의 변화를 일본 사례의 주요 대책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전략, 결혼장려, 출산장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종전의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 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비용지원 위주에서 사회 인식의 변화로 전환하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37)(그림 5 참조). 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주거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한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54). 이는 다양한 저출산 원인 중 만혼화 현상이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청년 대상의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2016년부터 5년간 혼인율을 약 10% 제고한다는 명확한 목표치도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47). 다시 말해 청년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결혼을 통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38.

[그림 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_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당초 결혼 지원이 저출산 대응의 주된 정책 과제로 새롭게 포함된 것은 2009년에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보완판)"에서부터 였다. 동 계획에서는 추진 전략으로 기존의

¹³⁾ 이하 일본사례는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연구에서 일부 발췌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결혼"을 추가함으로써, 결혼 영역이 국가 정책의 개입 범위에 포괄되기 시작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이로써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자녀 양육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에 더하여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청년들이 결혼을 주거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추진 방향으로는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이 제시되고, 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그 전략으로 명시된다(그림 6 참조).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분야 중 결혼 지원의 한계점으로 만혼, 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인식 문화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일자리, 주거, 결혼 비용 등 결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6).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향	• 고용·주거 안정	• 임신·출산 국가 책임	• 아이·부모 관점	• 이용격차 해소
	• 결혼진화 분위기	• 포용적 가족관	• 신뢰 형성	• 행태·문화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맞춤형 보육	▶일·가정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추진 전략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돌봄 지원체계 강화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교육개혁 추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38.

[그림 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

반면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이래 기본 방향으로 명시되어 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및 기반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표 1 참조). 일본의 저출산 대응의 주요 목표는 엔젤플랜에서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에 두었으며, 아동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여 2010년 "아동·영유아 양육비전"에서는 아동의 기회 형평성 즉 모든 아동 이 존중받고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표 1〉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_저출산 분야(제1~3차)

 구 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추진 배경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국민이출산을 중단·포기하는 것은 주로 사회·경제적 제약에 기인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보육 인프라부족, 임신·출산관련사회적 지원 미흡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문화의 미정착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체계 구축 미흡	 인구구조 변동 추세, 고용구조 등 거시적 여건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미시 대책을 적극추진 과다한 양육·교육비, 주거비용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고비용 구조와 불충분한 인프라가 결혼과 출산 억제 	• 보육 투자는 양적 화녀 무모와 자녀 무모와 주에서 부모와 구려한 공통해 무모와 무정을 모려한 경우 모음 등 지원을 가정 입과 의 남성의 무상의 대장 대장 대장 대장 대장 등 한 제 의 등 집 장산의 모양 기 입사에 되는 이 가족관 보기 입자 대장 등 한 제 의 후 대장 이 의 후 의 의 사이 의 의 이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이 의 의 의 이 의
기본 방향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추진 개인과 가족, 사회가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	여성의 지위 향상, 일- 가정 양립 부문에 대 한 정책적강화 출산·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의 지속적 경감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 소년이 안전하고 건전 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들이 결혼을 주 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 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의 부담 완 화를 위해 교육과 보 육 환경을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

구 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대 해소
추진 과제 / 추진 전략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 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 성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건전한성장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한편 일본 정부는 "희망(희망 자녀수)과 현실(실제 자녀수)과의 간극"을 저출산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침으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곧 결혼과 자녀 출산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함을 의미한다(카츠마타 유키코, 2017).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방정부에서도일관되게 견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해 12월에 일본 도쿄도청 저출산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도쿄도는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따라서 저출산 대응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사회 환경의 조성에 주력한다는 점을 명확히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기조는 출산을 지원하나, 출산을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이 가능한 "사회 환경의 조성"에 주력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은 저출산 극복의 모범 사례인 스웨덴에서도 유사하게 견지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의 간담회에서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장려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7).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저출산 대응의 목표는 "희망하는 수 대로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며, 주요 전략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가 족생활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단지 가족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 가치의 강조이기 보다는, 직장생활 또는 노동 중심 사회에서 친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보살핌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에 기반하면, 저출산 대응의 목표치와 성과는 단지 합계출산율에 국한되지 않는다.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사회 환경의 조성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할 영역별 세부 기준 및 그 달성 목표치의 설정이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 의하면, 2015년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달성 목표치는 각 단계별로 <표2> 와 같이 제시된다. 이들 목표치는 출산과 양육에 요구되는 기반 및 관련 노력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달성 목표치

	현황(최근 수치)	목표(2019년말)		
임신·출산				
아동양육가정포괄지원센터	-	2020년까지 전국전개		
아동양육가정포괄지원센터의 임산부지원 실시 비율	-	100%(2020년)		
영유아 가정방문사업	1,660개 시정촌(2013.4.1)	전 시정촌		
신생아 집중치료관리실(NICU)병상 수 (출생아동 1만 명당)	26.3병상(2011년)	전체 도도부현에서 25-30병상(2019년)		
불임전문 상담센터	62개 도도부현 및 시(2014년)	전체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2019년)		
부부 예정 아동수 실적지표14)아동수	93%(2010년)	95%(2020년)		
	교육	, ,		
임신, 출산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의 이 해 비율	34%(2009년)	70%		
남녀의 등	근로방식 개혁			
남성배우자의 출산직후 휴가 취득율	-	80%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율	2.03%(2013년)	13%(2020년)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남성의 육아,가사관 련 시간	하루 67분(2011년)	하루 2시간 30분(2020년)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8.8%(2013년)	5%(2020년)		
연차유급휴가취득율	48.8%(2013년)	70%(2020년)		
노동시간 등 관련 노사간 대화 기회를 갖는 기업의 비율	60.6%(2013년)	전체 기업(2020년)		
주1회 이상 종일 재택고용형 텔레워크 비율	4.5%(2013년)	10%(2020년)		
첫 번째 아동출산 후 여성의 계속 취업율	38.0%(2010년)	55%(2020년)		
여성취업율(25-44세)	71.5%(2014.9월)	73%(2020년)		
٦	역사회			

구분	현황(최근 수치)	목표(2019년말)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로	040/140/\7]			
종합적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243(14%)개	70%이상의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수	시정촌(2014년)			
결혼·임신·아동·아동양쇠	국에 따뜻한 사회분위	기 구축		
모성보호 인정마크 인지도	45.6%(2014년)	50%(2018년)		
베이비 마크 인지도	-	50%(2020년)		
아동양육지원 페스포터 사업 협찬 가게	약 22만개	44 [] [] [] []		
수	가게(2010.11월)	44만개 가게		
공동주택 중, 도로에서 현관까지				
휠체어·베이비 카가 통행가능한 주택	16%(2008년)	28%(2020년)		
비율	, ,	,		
특정도로15)의 베리어프리(장애물 제거)비율	83%(2013년)	100%(2020년)		
주요 생활관련도로의 신호 등의 베리어프	97.8%(2013년 말)	1000/ (2 01414)		
리	97.8%(2013년 달)	100%(2016년)		
여객시설 베리어프리	83.3%(2013년)	100%(2020년)		
광장이 베리어프리화된 도시공원비율	48%(2012년 말)	약 60%(2020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건축물의	F2 (0/ (2012) f)	of (00/ (2020) 4)		
베리어프리	53.6%(2013년)	약 60%(2020년)		
베리어프리화된 기차차량 도입 비율	59.5%(2013년 말)	약 70%(2020년)		
저상버스 도입 비율	33.2%(2013년 말)	약 70%(2020년)		
시프트가 장착된 버스 도입 비율	3.9%(2013년 말)	약 25%(2020년)		
베리어프리화된 여객선 도입 비율	28.6%(2013년 말)	약 50%(2020년)		
베리어프리화된 항공기 도입 비율	92.8%(2013년 말)	100%(2020년)		
복지택시 도입 대수	13,978대(2013년 말)	약 28,000대(2020년)		
결혼·임신·아동·아동양육에 따뜻한 사회	***************************************	······································		
의 실현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9.4%(2013년 말)	50%		
사람 비율				
	기업			
 가족친화적 기업마크 취득기업	2,031개	3,000개 기업		
기독선석적 기업막고 취득기업	기업(2014.12월)	3,000/11 / 1 百		

자료: 일본 내각부(2015).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재구성.

이에 앞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에서는 주로 보육서비스 위주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데, 대부분 계획한 기간 내에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해미 외, 2016: 128-130).

¹⁴⁾ 부부의 평균 출산예정 아동수 대비 실제 출산아 비율임.

¹⁵⁾ 역, 관공서, 병원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다수의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항상 도보로 이동하는 도로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임.

〈표 3〉 엔젤플랜 주요 사업의 목표치 및 달성도

단위: 명, 개소

중점시책 내용	목표치(1995-1999)	목표 달성도
0-2세의 영아보육	60만 명분 확보	58만 명
연장보육	7,000개소 정비	7,000개소
일시보육	3,000개소 정비	1,500개소
영유아 건강지원데이서비스 사업	500개소 정비	450개소
방과 후 아동 클럽	9,000개소 정비	9,000개소
다기능 보육소 정비	1,500개소 정비	1,600개소
지역 아동양육지원센터	3,000개소 정비	1,500개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1999). 신엔젤플랜.

〈표 4〉 신엔젤플랜 주요 사업의 목표치 및 달성도

단위: 개, 명, 개소(%)

		근기: 게, 6, 게エ(7)
사업내용	목표치(2004년)	달성도
영아보육 확대	68만 명	704,000명(104%)
연장보육	10,000개소	13,100개소(131%)
휴일보육	300개소	750개소(250%)
영유아건강지원일시양육지원	500 시정촌	500개 시정촌(100%)
다기능 보육소 정비	2,000개소	2,180개소(109%)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	3,000개소	3,000개소(100%)
일시보육	3,000개소	5,000개소(167%)
패밀리 스포터 센터	180개소	385개소(214%)
방과 후 아동클럽	11,500개소	12,400개소(108%)
후레후레 텔레폰 사업	47곳 도도부현	47곳 도도부현(100%)
재취직 희망등록자 지원사업	47곳 도도부현	47곳 도도부현(100%)
주산기 의료네트워크 정비	47곳 도도부현	47곳 도도부현(100%)
소아 구급의료지원	360지구(2차 의료권)	300지구(83%)
불임전문상담센터	47개	47개소(100%)
아동센터	1,000개소	1,095개
- 1 o 世り	1,000/ 12	(2001년,109%)
아동방송국	5,000개소	2,014개소(40.3%)
24시간 아동전화상담	47곳 도도부현	15개도도부현
24시신 기장선확 8 급	4/人 工工干包	(2002년, 32%)
가정교육 24시간 전화상담	47곳 도도부현	12개 도도부현
// 8교육 24시간 전화 8급	4/人 工工干包	(2002년, 26%)
종합학과 설치	500개 학교	248개 학교(49.6%)
중고등학교 일관교육	500개 학교	153개 학교(30.6%)
심리교실	5,234개 학교(2000년)	8,467개 학교
	ファムグサ/ 当止(2000 行)	(2000년, 16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04).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編(각 년도). 『保育白書』.

나.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의 변화, 포괄범위의 확장과 우선순위?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평가로서,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즉 국가 책임보육의 실현, 임신 출산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을 들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8). 〈표 5〉에서와 같이 동 계획에서는 이들 기존 정책들의 내실화에 더하여 청년고용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강화되고, 난임지원 확대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주력해 온 양육지원 이외에도 "결혼, 임신 및 출산 지원"이 새롭게 강조되고, 2015년부터는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6: 142). 일본의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의 의지는 일본의 "1억 총 활약 플랜"의 정책 과제에서도 확인된다. 동 계획의 목표는 단지 출산율 제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조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주요 영역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지원 이외에도 여성정책 분야(여성 활약 추진)와 지역에 기반한 아동정책분야 일반(지역에 적합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열악한 성장 및 발달 환경에 처한 아동 또는 요보호아동즉 저소득층 아동,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아동, 미등교 및 중도 퇴학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내실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사회안전망 차원의 고용과 의료지원이 포함된다. 이처럼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당초 일·가정 양립지원 위주에서 사회보장 전반과 결혼지원 영역까지 확장되었다(그림 7 참조).

〈표 5〉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1억 총 활약 플랜의 비교_정책 과제

제3차(2016~2020)

-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지원체계 강화 등

제3차(2016~2020)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맞춤형 보육: 보육·유아교육 개혁 등
- 돌봄지원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등
- 교육개혁 추진: 공교육 역량 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등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등
-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1억 총 활약 플래

- 결혼지원 충실
- 고교생 대상 가정 직업 장래교육: 영유아 체험활동 등
- 미혼율 높은 지역 중심 종합적 결혼지원 모델 개발
- 임신 출산 육아불안 해소
- 아동양육가정 포괄적지원센터 전국 시정촌 설치
- 불읶치료 지원, 소아 주산기 의료체계 충실
- 지역아동양육지원 거점, 이용자지원사업, 패밀리 서포트 사업 실시
- 아동양육 세대가 부모 세대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월세 감면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비
-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 보육인재 확보
- 보육사 처우 개선
- 근로방식 개혁
-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여성 활약 추진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 다양한 근로방식 정비
- 육아 종료 후 직업훈련교육 등 지원
- 지역에 적합한 지원
- 지역 전체가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활동 추진
- □ 교육기회 저해 요소 극복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장학금 제도 충실
- 미등교 중도 퇴학자 지원
- □ 양육 곤란 상황 가족 아동에 대한 배려, 대응책 강화
-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부양수당 충실
- 저소득층 아동 학습 지원
-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아동의 진학 지원

제3차(2016~2020)

- 아동상담소 전문성 강화
- □ 3세대 동거, 근거리 주거환경 정비

자료: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pp. 146-147.

Policy Areas	Angel Plan	New Angel Plan	Plan for Supporting Child and Childcare	Vision for Child and Childcare	Outline of Measures against the Declining Birthrate
	FY1995-1999	FY2000-2004	FY2005-2009	FY2019-2014	FY2015-2019
Measures to support balancing work and child raring (Including measures to reduce work hours)	0	0	0	0	0
Support of re-employment	0	0	0	0	0
Expansion of childcare services (Including measures for after school children)	0	0	0	0	O
Community-based childcare support projects	0	0	0	0	0
Enhancement of school education	0	.0	0	0	0
Maternal and child health	0	0	0	0	0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child raring	0	0	0	0	0
Economic support	0	0	0	0	0
Support for large families	0	0	0	0	0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	THE CO.	0	0	0	0
Enhanc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region		0	0	0	0
Learning of the value of life, role of family		0	0	0	0
Employment support for youth			0	0	0
Measures for social care, child abuse prevention			0	0	0
Measures for child poverty				0	0
Marriage support		a a	ct of Over	coming	0
Promotion of grandparents support	7	1/2	Anna and the property of the same of the s	-	0
Provision of information of marriage, pregnancy/childbirth and child care	7_		opulation D vitalizing L		0
Creating social atmosphere to support the marriage and child raring	V		conomies"		0
Collaboration with mesures for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0

자료: 카츠마타 유키코(2017). 일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9.

[그림 7]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범위 확장

한편 저출산 대응의 세부사업 전반을 비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주요 과제 및 사업별 추진내용을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지원에서 일본의 경우는 비정규직 증가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므로, 젊은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과 경력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전반과서비스 산업 일반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역보인다. 주거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추진으로 주거 안정성의 보장이 강조 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도 결혼 지원의 주체가 국가 이외에도 학교와 기업이 포괄됨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임신·출산 지원에서 일본의 경우는 소아와 주산기 의료지원 내실화가 포함되어 저출산 대응의 범위에 의료지원이 적극적으로 포괄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 양육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맞춤형보육, 돌봄지원 체계 강화, 교육 개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도 보육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양국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되므로, 학령기 교육비 부담 경감은 공통적으로 세부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 부문은 양국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됨에 따라, 기업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 일본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여성고용 촉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방식 개혁에서는 최저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포괄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유 럽국가 등에 비해 사회안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출산 원인에의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강조된다고 본다.

〈표 6〉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1억 총 활약 플랜의 비교_세부 사업내용

구분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1억 총 활약
결혼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제고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 일자리 영토 확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제고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결혼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젊은 층 고용안정·처우 개선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 유도 젊은 층 능력 및 경력개발 추진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 젊은 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제 확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일본 서비스대상 창설 및 표창,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IT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 협의회 창설 중소기업 경영 강화법 제정: 분야별 지침 책정, 성과 사례 전국 전개 결혼지원 충실

- 학생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 폭 확대
-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미혼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 결혼지원 모델 창안, 전국 확 산 지원
- 기업 및 단체가 실시하는 결혼지원 모 델에 대한 우량사례 수집·분석·표 창 및 확산 지원
- 고교생 대상 가정, 직업, 장래 교 육
- 젊은 층, 아동양육 가정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우선입주 추진
- 임신·출산·육아 불안 해소
- 아동양육가정 포괄지원센터 전국 시정촌에 설치, 중점지역 설치 확대
- 불임치료 지원 충실
- 소아, 주산기 의료체제 충실
- 3세대 동거, 근거리 주거환경 조성
- UR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인 아동양 육 세대가 부모세대와 근거리에 주 거하는 경우, UR임대주택 월세감액 조치
- 3세대 동거지원(신축 30만엔, 재보수 50만엔, 재보수 비용 10% 소득공제)

-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행복출산패키지)
-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 여성건강 증진 강화
-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비혼·동거기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 별 개선
- 포용적 가족관 형성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 「아동 놀 권리 헌장」 제정 및 범 부처 놀이 계획 수립
-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 등 놀 여 건 확충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 쉮터 설치 확대
- 아동보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아동보호체계 개편
- 5대 아동안전교육 시 교육 효과성 제고 위해 체험형 교육 포함, 생활 안전 분야 추가로 아동안전사고 예방 강화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임신· 출산 지워

	-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퇴치 수 준 95%까지 향상을 위한 접종률 관리 강화 ● 맞춤형 보육 -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 교육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정비 - 2017년까지 대기아동 완전 해소 -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통한 신규인원 확충
자녀 양육 지원	-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지원 체계 강화 -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교육 개혁 추진 -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 공교육 역량 강화 - 사교육 부담 경감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빈 교실, 국유지 활용 등 통해 신 규인원 확충 - 방과 후 아동 클럽 및 방과 후 아 동교실을 설치 및 일체적 운영 ● 보육인재 확보 - 보육사 처우 개선을 통해 전체 산 업체 월 평균급여와 동등 수준으로 개선 - 2016년까지 보육사 희망학생에 대해 반환면제 장학금 및 재취직 보육사를 위한 준비금제도 창설 - 연2회보육사시험실시, 연수 추진 - 단시간 정규직원 제도 추진, 고령자취업 추진 ● 교육 기회 저해요소 극복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 장학금제도 충실 - 미등교·중도 퇴학자 지원 대책 ● 양육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가족아동에 대한 배려·대용책 강화 - 한부모 가정 지원 -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아동의 진학 지원 - 아동상담소 전문성 강화
일· 가정 양립 지원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 근로방식 개혁 - 비정규근로자 처우 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 최저임금 인상 - 장시간 노동 시정 ● 여성활약 추진 - 육아종료 후 직업훈련교육 및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사업가 지원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른 기업의 지주적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 육이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 제도 개편 방안 검토

행동계획책정 추진 및 다양한 근로 방식정비를 위한 지원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
- 지방판 노사정회의 추진 지원
- 지방지업 인탄쉽 제도 활용 위한 인재유입 유도, 도시 비정규 근로자를 지방의 정규직으로 취업 지원 강화
- 지역 전체가 아동의 학습과 성장 을 위한 활동 추진

자료: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pp. 148-149.

4.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대상 및 그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및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출산 대응의 주요 대상 및 목표

저출산은 단지 출생아수의 감소가 아니라, 출산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희망하는 수 만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실제 자녀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희망하는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희망하는 이들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위기에의 대응 방식은 단지 합계출산율 제고 이외에도,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사회적 투자 확대 즉 여성고용을 통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 와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존 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에는 여성고용율 제고와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설 정된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은 출산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주요 타겟은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에 한하며, 핵심 과제는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녀수만큼 출산, 양육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응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나 첫 자녀 출산 시기를 미루고 있는 가구, 두 자녀이상을 희망하나 첫 자녀 출산 이후에 추가 출산을 포기하려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적으로 말해 결혼과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층과 부부가구는 저출산 대응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가족의 가치 등을 통해 이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결혼 과 출산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나. 저출산 대응의 정책적 기반과 핵심 과제

자녀를 출산,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 및 자녀를 돌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일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저출산 대응의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나,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인식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우선 자녀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해결할 만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다. 그러므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은 결혼은 물론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저출산 대책의 범위에서 포괄되는 것은 의문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말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대상이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고용정책에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가? 이는 다시 말해 고용정책은 애초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각 개별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본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 하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안정된 소득보장은 저출산 해결의 가장 일차적인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한 안정된 소득보장은 곧 결혼과 출산에 요구되는 주거비용과 자녀양육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보육료 지원 위주로 추진해온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해 대리양육이 반드시 필요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양육비 절감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홑벌이 가구와 같이 가정내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1인 생계부양자로 인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 등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자녀 출산으로 인해 가구경제가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아동 빈곤 즉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로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에는 "보육의 질"과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면, 실제 이용가능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문화는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육료 지원의 효과마저도 상쇄시킬 수 있다. 단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장시간 보육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된다고 하더라고 아동의 입장은 물론, 부모의 희망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마모토 마나부(山本 學, 2015) 및 사카쯔메(坂爪, 2008)는 보육서비스의 정비로는 출산율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한층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인 30대 및 40대의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와 이들 중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개선 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돌봄시간 지원에서 남성의 제도 이용율은 그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 과제이나, 그 접근 방식에도 점검을 요한다. 즉 남성의 육아는 기존에 여성에서 전적으로 부여된 자녀 돌봄의 책임을 남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성의 권리 즉 부모권 강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장시간 노동과 노동 중심의 성취 지향적 사회분위기 하에서 남성에게 육아를 의무로만 떠 안기는 것은 여성의 이중고통을 남성에게 확장하여 결과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6a).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보건복지부(2016b). 보도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2-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6. 9. 6).

보건복지부(2017). 보도참고자료: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하게 추진(2017. 2. 22).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이데일리(2017). "프랑스 노르웨이 저출산 극복 비법은?" 저출산·고령화특 위 열동모드(2017. 3. 16).

일본 내각부(2015).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일본 후생노동성(1999). 신엔젤플랜.

일본 후생노동성(2004).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 全國保育団体連絡會· 保育硏究所編(각 년도). 『保育白書』.

통계청(2017a). 보도자료: 2016년 12월 인구 동향(2017. 2. 23).

통계청(2017b). 보도자료:"국민의 삶의 질"종합지수 작성 결과(2017. 3. 15).

카츠마타 유키코(2017). 일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onald R. Rindfuss and Minja Kim Choe(2015). Low and Lower Fertility, "Diversity across Low-Fertility Countries: An Overview". Springer.



§ 2017년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 §

토론

김영미 교수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원순 부연구위원 | 육이정책연구소 국제협력팀장/ 출산 및 부모지원단 최은영 교수 | 충북대학교 이동복지학과 강준 서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 토론문

김영미 교수(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청년 기준이 가변적인 이유

- 청년 기준은 법령 및 제도, 사회적 통념, 국가마다 상이함.
- 이 연구에서는 만 20-39세 미혼 남녀로 정의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44세까지로 정하기도 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29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서는 15-34세로 규정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관련 법률에서는 만19세부터 29세, 34세, 39세로 다양함. 유럽 국가들이 실시 중인 Youth Guarantee 제도는 15세부터 25세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결국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국가정책이 개입·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임.

2. 저출산 정책이 청년 미혼자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

-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정책,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관심 갖는 청년은 '출산이 가능한, 그렇지만 출산의 합법적 boundary인 결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들'일 것임. 결혼과 출산이 강고하게 묶여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그러함.
- 최효미 외(2016)의 실태조사 대상인 20세부터 39세는 '출산'개입을 염두에 둔 정의, 44세 이하까지도 포함한 것은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도 염두에 것이라 할 수 있음.
- '출산율 제고'가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 비혼자에 대한 관심,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관심이라 기보다는 출산 가능하나 출산하지 않는 데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음.

3. 무엇이 문제인가?

- 혼인율 하락, 출산율 하락,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함. 출산율이 하락했고, 혼인건수가 감소했고, 초혼연령은 증가했으며,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상'을 서술함.

- 하지만 이것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노동시장 참여 증가, 임금 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비혼이 증가하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현상'을 두고, 이 현상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음. 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룬 모든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귀결된 것은 아님을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이 현상을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미혼)의 일탈 문제로 보고 개인을 비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함. 사회문제를 개인문제로 인지해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음.
- 즉, 청년 미혼/비혼 이슈를 이야기할 때, '구조'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취급할 때, '현상이 놓인 맥락'이 아닌 '현상 자체'를 두고 논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
-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와 '맥락'에 주목해야 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결혼을 원함.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4.5%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했음.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을 '결혼 기피'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오히려 '포기'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에는 '비자발적 포기'도 포함되어 구조와 맥락이 변화한다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 출산을 원함.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했음. 결혼의향이 없는 이들 중에도 10%는 출산의향이 있음.
- 고용불안, 긴 노동시간, 취업경쟁 심화,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높은 주거비용, 여전한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불평등한 가사양육 분담, 미흡한 복지 지원으로 가 족에게 맡겨진 복지책임 등 다양한 장애물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면에 놓여 있음.
-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이면에 놓여 있는 구조적 장애물이 단단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보다 현실적 힘겨움 때문에 국가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개인들을 문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임.
- 여기에 반영된 국가 중심의 도구적 관점도 문제임.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존재한다는 국가 중심의 도구적 관점은 한국 사회의 인구정책, 경제성장정책에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음. 1960년대부터 실시된 강압적 산아제한정책은 출산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었고, 이는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요인이기도 함.
- 더 이상 출산율 수치 자체가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국가 중심의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출산하는 여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조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해야 함.

-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출산 대응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함. 따라서 정부가 출산 및 인구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함. 하지만 출산율은 자체로 '목표 (object)'되어서는 안 되며,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않음. 출산율은 '결과 (outcome)'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는 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함.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 출산을 원하지만, 사회구조적 장애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 이는 헌법이 보장한'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문제가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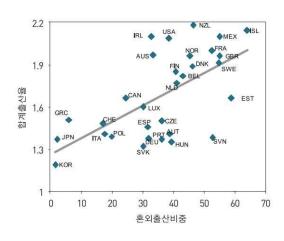
4.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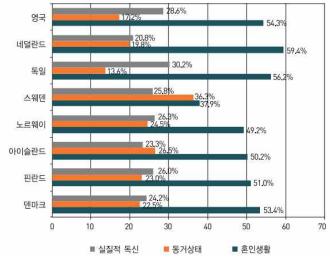
- (1) 사람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지원, 충분했는 가?
- 10년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평가하면서, "10년 동안 출산율 제고에 약 80조원을 투입했는데 2002년과 2016년 합계 출산율 동일,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기혼자 유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만 투입했기 때문이고, 비혼자들에 대한 개입이미흡했기 때문이다. 비혼자 혼인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주거 지원, 결혼 출산 인식 제고 강화하자."이것이 변화된 저출산 대응방향의 핵심내용으로 생각됨.
- 하지만, 10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삶의 전반에 만연한 불안의 문제를 해소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 2016년 공공사회지출 GDP 대비 10.4%(OECD평균 21.0%), 가족에대한 지출 2014년 1.1%(OECD 평균 2.1%)
- (보고서) 소득이 적어서(6.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8.3%), 주택마련 및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4.1%) 결혼의향이 있으나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
- (2)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성평등정책 강화 없이 출산율 제고가 가능할가?
-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에 있음. 일하는 것과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양자 택일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출산율 제고는 불가능함. 고령화 대응도 어려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우려하면서 여성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모는 것은 모순적임.

- (보고서) 결혼 의향 없는 이들 중,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14.6%),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4.7%), 가족부양 부담감이 커서(12.0),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싫어서(2.9%) 등. 자발적 결혼 연기자 중에서는 결혼 후의 사회적 역할이 부담스러워서(3.4%),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중에서는 일가정 병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0.6%) 등.
- 결혼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상당수가 일·가정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결혼을 '비자발적으로'포기했다고 볼 수 있음.
- 연구에서 자발적 결혼 연기, 비자발적 결혼 연기, 결혼 회피로 구분하고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식적으로 보자면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주요 정책 target이 될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비자발적으로 만든 장애물을 제거하면 될 것이기 때문임.
- 그런데 자발적, 비자발적 연기자 구분이 상당히 자의적임. 결혼 연기 사유를 1-3순 위로 묻고, 1순위 응답문항을 기준으로 구분했음. 실제로는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가 중복됨. 결혼기피자들의 경우도 '비자발적'포기사유가 더 많음.
-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가족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가 가장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역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 남유럽,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
- 이 연구에서는 미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혼자들이 갖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기혼자들과 차별적이고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결론에서 적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됨과 자녀양육에 따른 궁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인식 개선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보이고, 과연 적절한 정책 제언인지 의구심이 듦.
-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적 기반은 이미 상당부분 갖춰졌지만, 청년층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따라서 기업 특성에 따른 편차의 해소와 제도 활용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문제가 청년층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임.
- (3) 결혼과 출산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그대로 두고 출산율 제고가 가능할까?
- 보고서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 80.3%가 동의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가 57.1%,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에 42.4% 가 동의했음.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에 80.3%,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에 76.5%가 동의했음. 결혼

과 성관계 및 출산의 연결고리가 인식 차원에서는 비교적 약하지만, 현실 차원에서는 결혼에 얽매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규범, 관습, 부모에 대한 경제적의존 등으로 동거 및 혼외출산에서 부모와 사회의 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국가비교연구에서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중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여줌.





'아버지의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토론문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국제협력팀장/ 출산 및 부모지원단)

김혜준 대표의 원고, "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를 잘 읽었습니다. 연구자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양육에서 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가치를 미시적 가치와 거시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시적 가치에서는 지금까지 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양육 대상인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참여 가치를 다룬데 반해, 발표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의 행복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양육은 의무나, 어쩔 수 없는 노동의 측면보다 양육권, 부모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을 바라보았다. 발표자는 또한 아버지의 권리라는측면에서 바라본 양육참여의 가치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해석하여 거시적 가치라고 칭하였는데, 행복한 가정이 지역사회와 직장, 나아가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아버지 양육의 미시적인가치라고 칭한 자발적이고 행복한 육아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우리 연구소의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연구 결과를 보면, 영아 아버지나 유아 아버지나 아버지교육 이수, 양육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의 실태가 실로 의미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통계가 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 80% 이상은 매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육아기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인 것이다. 발표자 역시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부모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발표자료에서 인용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버지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걸림돌로 직장 분위기

를 꼽았다.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선뜻 일어설 수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이다. 앞서 발표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사실 낮은 노동생산성과 관계가 깊다는 측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최초의 Nursery School의 창시자로 유명한 로버트 오웬이 19세기 초 18시간에 달하던 일일 노동시간을 12시간, 10시간으로 줄이며 오히려 생산성이 증대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줄어든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높은 생산성과 연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발표자는 제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발전방향"을 통하여 어머니를 돕는 제2의 양육자, 보조자 혹은 대체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 아버지만의 양육이 있음을 밝히고 아버지 스스로가 부성의 본질을 이해하여 양육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의 아버지상을 기념하고 축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장을 읽으며 성역할(gender role)에 관한 Slattery(2006)의 주 장을 떠올렸다. Slattery(2006)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언론의 기여가 지대함을 지 적하였다. 각종 매체를 통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언론 외에 법에 의해서 도 "공식적"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가 예를 든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은 다양하게 부모의 성역할을 어머니와 아버 지의 역할로 구분짓고, 각종 육아관련 제도에서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한 현실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 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발표자의 자료에서 응답자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아휴직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버지 의 평균임금이 어머니보다 높은 상황에서 최대 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가 어머니일 것이다. 발표자의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가 대다수라는 통계 속에서 아버지 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아버지의 부성, 부 모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착화된 성역할을 깨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Slattery(2006)는 첫째, 현상유지하고 싶어 하는 갈망, 둘째, 기존 성역할 문화의 헤게 모니, 셋째, 가정 질서를 무너트리고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넷째, 성역할에 대한 터부의 4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는 아버지의 부모권을 주장하 기 위한 길에는 현재의 안정된(!) 질서를 깨트리고, 권력화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벗 어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모멸스러운 시선을 극복해야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 놓여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녀의 성역할이 이전 사회에 고착된 문화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착화된 문화는 어머니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도 족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는 이러한 오래된 성문화 속의 아버지 역할과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받는 아버지의 역할 사이에게 고통받고 있다.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혹은 사회진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아버지 역시 옛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걸맞은 아버지 역할을 찾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토요일에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멈춰 설 것만 같던 불안은 토요일 휴무가 정착된 지 불과 몇년도 지나지 않아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회 곳곳에서 포스트모던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이삼십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봉건적 부모 성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의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정에서 행복한 아버지가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가정의 행복이 직장의 발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모순을 꿈꾼다. 오늘 발표자의 발표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Slattery, P. (2006).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Routledge.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 토론문

□ 최신 data와 자료를 통한 현황 분석 및 정부대응의 최신동향, 한국 저출산의 특수 성 등을 잘 정리해 주신 발표문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큰 틀에서 몇 가지 덧붙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고사 암.
□ 이제 저출산문제는 생물학적, 개인적, 경제적 focus ⇒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진단과 포괄적 대응으로 바뀌어야 함. 저출산은 하나의 사회문제(a social problem)가아니라(여성의 문제는 더더욱 아님), 많은 사회문제의 증상적 표출, 응집된 형태의사회문제(societal problem)임.
□ 인구학적 요인별, 경제적 요소별 대응방식으로는 부족함. 우선 불평등(격차확대)과 불확실성의 축소가 필요: 단순히 현재의 지출을 감당할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현재 자녀를 돌볼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것만으로는 한국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초저출산의 깊은 늪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 및 근로안정성 개선이 급선무임. 이를 통해 미래예측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야만 저출산 극복이 가능해 질 것임.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 해소로 불필요한 대학진학 축소, 성인초기 인구(NEET 족 제외)에 대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초등학교 진학전 의료비 전면 무료화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함. 즉, 인생초기의 의료와 성인기 진입시 주거를 공공성 높게 추진하고 + 불필요한 투자비용의 악순환을 줄이는 것임.
□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대표적인 무급 돌봄노동임. 단기적으로는 양육 크레딧을 만들고(돌봄노동 인정용 vs. 현재의 출산 크레딧은 출산 장려용), 장기적으로 성인

의 유급 노동시간과 무급 노동시간의 balance를 추구해야 함. 예) 근로시간 단축, 가족과의 시간 확보... 너무도 답답했던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음. 우

리는? 일하다 죽을 것 같은 사회에서 출산률이 회복될 수 있을까?

- □ 아울러, 다양한 가치, 특히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 관련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논의가 필요함. 예) 비혼모, 입양, 동거혼 하의 출산... 한국은 아직도 고정적이고 단선적인 생애주기 및 삶의 방식을 norm으로 강요받는 사회임. (양)성평등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 대화를 통해 회자되는 정도만큼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제도에 녹아들지 않았음(이상과 현실의 괴리). 노동연구원에서 KLIPS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은 미혼인 경우는 취업상태일 때, 기혼인 경우는 미취업일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음(2015).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임. 일상적인 삶의 struggle과 격차가 누적되고 &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값진 미래에 대한 투자인 출산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 □ 첨언: ①저출산이 아니어도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들을 모두 "저출산정책"우산 아래 묶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misleading하는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함. ②"출산" 자체에만 몰두하는 담론도 양육과 성장이라는 넓은 틀로 확장되어야 함. 인구의 질, 공평한 출발 등이 함께 조명되어야만 한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음. ③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결혼하라 강요하고 출산하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장애물을 거둬 주고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히 투자하고 살펴주면 적당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글 밖의 커뮤니티가 필요함.
- □ 총체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함.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토론문

강준 서기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

1. 들어가며 : '저출산' 대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저출산'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1~2개의 획기적 대책 (killer policy)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도 다른 정책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짐

이러한 특성을 도외시 할 경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급한 실패론'에 빠질 수 있으며,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 노력보다는 '획기적인 대책' 자체에만 매달릴 우려가 있음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구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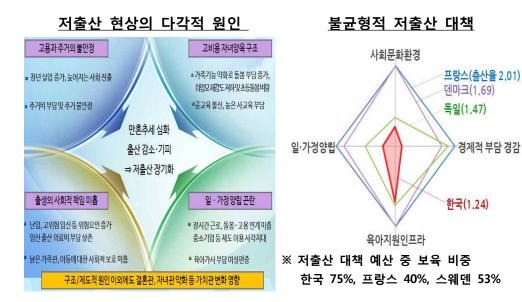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 제도의 도입 등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06년 2조원대에서 2015년 약 15조원까지 급증하고, 지난 10년간 약80조원이 투자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보육투자 확대였음이 이를 잘 보여줌

향후 저출산 대책은 그간 갖추어온 기본적 토대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조성, 일·가정의 양립 실현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강화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여러 가지 사회정책 중 하나

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정책, 사회정책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정목표'로 설정되고, 정부뿐만 아니라 전사회적 총력대응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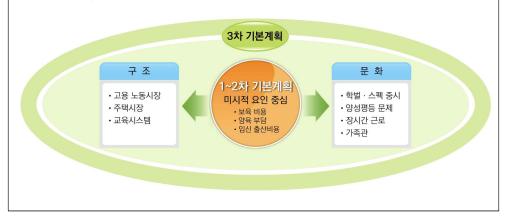


2. 3차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실행이 관건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만혼·비혼추세 완화를 위한 고용·주거·교육 등 구조적대책,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였음

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의 차별성

- ▶ 그간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미시적 대책을 넘어서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구조, 문화** 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까지 확장
- ▶ **만혼·비혼 대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그간 미흡했던 분야는 **본 격적 대책** 추진
- ▶ 난임 지원 등 효과성 높은 대책에 집중적 투자
- ▶ 보육은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성숙**에 초점, **돌봄의 사회화**를 0~5세에 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 ▶ 일·가정 양립은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 육아·가사로 실천력 제고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그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충분치 않았던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 대책들이 '저출산 극복' 관점에 서 고민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기본계획의 당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평가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시행계획 점검주기 단축(연1→4회), 핵심과제 현장점검시스템 도입, 정책평가 개 선(집행률→성과) 점검·평가체계, 범정부적 대응 노력 강화의 성과로서 2016. 8. 25.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보육·주거 등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이나, 출생아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보완 대책 성격

앞으로도 기본계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실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면밀한 점검·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3. 향후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 1 : 정책의 약한 고리 보완

결혼을 위한 일자리·주거대책,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약한 고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결혼을 위한 일자리·주거대책

청년일자리 대책은 결혼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3차 대책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청년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보다 근 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근로시간단축과 임금피크제 등이 청년채용과 연계되도록 청년고용친화적 노 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유인하는 대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3차 기본계획에서 강조된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정책체감도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작동되도록 정책대상과 수단을 세분화하고, 생애주기별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3-2.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모든 아이가 매우 소중한 상황에서 기본적 임신·출산의료비 뿐만 아니라, 난임, 미숙아, 고위험산모 등 취약대상에 대한 의료보장을 사회가 책임지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미혼모, 동거가정 등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 도록 가족형태에 따른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필요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청소년 한부모(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자녀양육 등 자녀를 키우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 양육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보완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3-3. 맞춤형 돌봄

국가책임보육, 맞춤형 보육체계 전환 등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질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돌봄과 관련하여 남겨진 과제임

무엇보다 한해 약 3만명의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연간 약3만명 경력단절, 남편·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건보공단, '15)

현재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0~5세 중심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 황임

다만,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학교 현장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초등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16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400여개 학교가 입학생 10명 미만, 향후 학교·교원 등 인프라 과잉 예상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보완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맞춤 형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포함한 가정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3-4. 일·가정 양립

취업여성 출산율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생산 인구 감소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통한 인구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 한 의미

- * 합계출산율 : 전체 여성 1.2명 vs 취업 여성 0.7명 vs 공무원 여성 1.4명('14. 보건사회연구원)
- *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반비례 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비례관계로 변화(OECD)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이 국가책임보육의 실현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의 시기라고 생각함

일·가정 양립은 노동시장 구조, 기업·근로자의 인식·행태, 양성평등, 무한경쟁 사회체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므로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New Normal)을 만드는 큰 틀에서의제도개선과 사회적 논의 필요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이용기간, 급여수준, 안정적 재원기반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 일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등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중요하며, 임신·출산·양육기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고용시스템을 바꾸는 제도·문화적 노력과 이를 뒷받

침할 노·사·정의 공감대 형성과 실행이 향후 보완대책 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고용-돌봄 의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4. 향후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 2 : 인식개선과 추진기반 강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소자녀관을 개선하고, 약해져만 가는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는 인식개선 정책도 앞으로 지속 보완해야 할 것임

다니엘손 前 주한 스웨덴 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스웨덴 출산 율 회복의 비결로 평등한 부부, 자녀의 선택의 존중 등 새로운 가족문화를 강조한 바 있음

낡은 가족문화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이 중심인 결혼, 부부가 평등한 가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때,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한편, 청년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구조적 대책의 이행과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 행태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그간 계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독주(獨奏)가 아니라 경제계, 종교계, 지역사회 등과의 합주(合奏)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5단체와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향후 민간과 지역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인 센티브 발굴,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함

또한,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효과성 높은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분석·평가 강화를 위해 다학제적 정책연구 확대, 연구 인프라 확충 등 정책근거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임

5. 결론 : 저출산 극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모두의 일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장된 가족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긴 안목에서 힘을 모을 때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음